
 금융위원회	<div>보도참고자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보도	7.4(수) 조간부터 보도가능	배포	2018.7.3.(화)	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정 태 호 사무관 (02-2100-2833) 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824)
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	김 성 진 서기관 (02-2100-2951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기 한(02-2100-2990)		최 치 연 서기관 (02-2100-2991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0)		송 병 관 사무관 (02-2100-2651)
	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윤 상 기(02-2100-2910)		강 성 호 사무관 (02-2100-2911)
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	김 동 현 사무관 (02-2100-2593)
	FIU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(02-2100-1730)		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1722)
	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이 준 호(02-3145-8300)		장 경 윤 부국장 (02-3145-8001)

## 제 목 :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
### 1.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- ① **(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)** 기계설비·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(금리 최대 1.3%p 인하) 상품이 출시(6월)되고, 정책보증기관(신보)에서 추가 특별보증(보증료 최대 0.2%p 인하)을 제공(7월)합니다.
- ② **(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)**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(서울→전국)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(50억원)됩니다 (7월)
- ③ **(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)**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(8.22일)
- ④ **(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)**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%에서 200%까지 확대하되,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 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합니다. (9.28일)
- ⑤ **(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)** 중소·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(1조원 목표)가 출범합니다. (3분기)

- ⑥ **(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)** 기업구조혁신센터(전국 27개 창구)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됩니다. **(하반기)**
- ⑦ **(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)** 중견(또는 예비중견)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. **(하반기)**
- ⑧ **(성장지원펀드 조성·집행)** 성장지원펀드를 조성(6월, '18년 2.35조원) 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됩니다. **(하반기)**

## 2.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⑨ **(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)**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(벤수수료 정액제→정률제)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(편의점·제과점·약국 등)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. **(7.31일)**
- ⑩ **(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)**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'내일준비적금' 상품이 출시(14개 은행)됩니다. **(7월, 잠정)**
- ⑪ **(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)**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. **(7월)**
- ⑫ **(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)**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(최대 36%)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**(9월)**
- ⑬ **(비소구 적격대출 출시)**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됩니다. **(9월)**  
\* 비소구 보증자리론은 5.31일부터 판매 중
- ⑭ **(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)** '정부 24'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집니다. **(3분기)**
- ⑮ **(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)**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(서류간소화 등)됩니다. **(3분기)**
- ⑯ **(장기소액연체자 지원)** 금융회사·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(1천만원 이하, 10년 이상)연체채권을 매입·정리(2.26~8.31일까지 신청·접수)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. **(4분기)**
- ⑰ **(단체-개인 실손보험 연계)**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 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. **(4분기)**
- ⑱ **(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)**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. **(하반기)**

### 3.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.

- ①9 (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) 그룹차원의 건전성·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(7개)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. (7.2일)
- ②0 (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·제재 일관성 확보)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, 'FIU 제재심의위원회'가 별도 구성됩니다. (7월, 잠정)
- ②1 (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)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(금융지주, 증권금융, 집합투자업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에도 통제 의무가 부과됩니다. (8.28일)
- ②2 (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)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됩니다. (11.1일)
- ②3 (회계부정 과징금 시행)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(회사, 회사관계자, 감사인)이 부과됩니다. (11.1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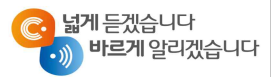
### 4.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.

- ②4 (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)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(RTI)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(은행 3월 도입)하게 됩니다. (상호금융 7월, 저축은행·여전사 10월)
- ②5 (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)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(복제불가 등)이 가능해집니다. (7.21일)
- ②6 (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) 저축은행·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,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. (10월)
- ②7 (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) 채무자 소득·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·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(300→100만원)됩니다. (하반기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## [붙임 1]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1.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/b>				
1	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 운영	<b>(신규)</b> ○ (IBK) 기계설비·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<b>우대대출 출시</b> - 총량규모 : 3년간 1조원 * 금리인하 최대 1.3%p 차감, 담보인정비율 최대 60% ○ (신보) 금융회사로부터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보에서 추가로 <b>특별보증*</b> 지원(최대 5억원) - 총량규모 : 3년간 5천억원 * 보증료 최대 0.2%p 차감	'18.6월          '18.7월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4)  IBK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(729-6565)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(053-430-4346)
2	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	<b>(현행)</b> ○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(예비)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저금리 대출 실시(서울 지역) * '16년 3개 민간사업수행기관이 9.5억원 대출 <b>(개선)</b> ○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대출 가능 지역을 <b>전국으로 확대</b> 하고 <b>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 내외로 확대</b> - (대출대상) 전국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- (대출조건) 기업·조합당 대출한도 <b>1억원</b> , 이자율 <b>4.5% 내외</b> ○ 아울러, <b>전국의 미소금융사업수행기관*</b> 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<b>저금리 대출</b> 을 시행 * 전국 170개 기업·은행미소금융재단, 및 지역법인 ※ 대출한도 1억원, 4.5% 이내 등	내규 시행 (‘18.7월)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(02-2100-2851)  서민금융진흥원 (2128-8087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3	투자가능한 신성장산업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'신기술사업자'의 범위가 제한적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 신기술사업자 범위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추가</p> <p>○ 신기술사업자 정의를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*을 명확히 규정</p> <p>*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 및 유흥·사행성 업종은 제외</p>	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 (‘18.8.22.)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2)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(02-3145-7447)
4	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신용공여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 종합금융투자사업자*는 자기자본의 100%까지만 신용공여 가능</p> <p>* 증권회사 중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회사로 '18상반기 현재 7개사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00%까지로 허용하되, 그 중 100%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로 한정</p>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‘18.9.28)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(02-2100-2652)
5	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	<p><b>(기존)</b></p> <p>○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부재로 구조조정 관련 자금확보가 곤란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 기업구조혁신펀드가 하반기 출범하여 중소/중견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 구조 개선작업에 자금을 본격 투자 (1조원 조성 목표)</p>	‘18. 3분기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(02-2100-2936) 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(02-2090-9121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6	구조조정 기업-투자자간 정보교류 강화	<b>(기존)</b> ○ 기업구조조정의 정보를 공유, 교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플랫폼 부재  <b>(개선)</b> ○ 지난 4월 기업구조혁신센터 및 전국 27개 창구를 설치 →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와의 <b>정보교류 강화</b> ○ 하반기중 <b>중소기업과 투자자간 IR 등 적극적 매칭, 홍보추진</b>	‘18. 하반기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(02-2100-2923)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부 (02-3420-5103)
7	중견(예비)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	<b>(현행)</b> ○ 중견(예비)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부재  <b>(개선)</b> ○ 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특성을 반영한 <b>맞춤형 지원 프로그램*</b> 도입 * 예비중견(①해외진출형, ②미래신성장형) 중견기업(③글로벌중견형) ○ 하반기 중 <b>1차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*</b> 착수 *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(금리우대 등) * 경영컨설팅 제공 * 파생, 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	‘18.하반기중 자금집행 개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1) 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(02-787-6925)
8	성장지원펀드 구성 및 투자 착수	<b>(신규)</b> ○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대규모 성장자금을 제공하는 <b>성장지원펀드 구성 및 투자집행 착수</b> - 조성규모 : ‘18년 2.35조원 - 투자대상 : 성장·회수 단계 중소·중견기업 ○ 성장지원펀드 투자기업 등에 투자연계 대출자금도 제공	‘18.6월   ‘18.하반기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1)  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(02-787-0662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2.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</b>				
9	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	<b>(현행)</b> ○ 뱅수수료 정액제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부과로 인해, 소액결제업종 일수록 보다 높은 수수료 부담  <b>(개선)</b> ○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편의점·제과점·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*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뱅수수료를 정액제 → 정률제로 개편	'18.7.31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2)
10	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출시	<b>(신규)</b> ○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14개 은행*에서 '내일준비적금' 상품 출시 *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대구, 수협, 우정사업본부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  ○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 (재정), 비과세 혜택 부여 예정	'18.7월 중 상품 출시 (목표)	금융위원회 은행과 (02-2100-2951) 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(3705-5422)
11	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조정금리 추가인하	<b>(현행)</b> ○ 프리워크아웃시 기존채무 금리의 1/2 이하*로 감면조정 * 단, 하한 5% ~ 상한 10%  <b>(개선)</b> ○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정된 금리를 추가로 인하조정 - 24개월 성실상환시 20% 추가 인하 - 48개월 성실상환시 20% 추가 인하 * 예시 : (감면조정) 10.0%→ (24개월) 8.0%→ (48개월) 6.4%	신용회복지원 협약 (‘18.9월)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2613)  신용회복위원회 (02-750-1071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2	해외원화결제(DCC) 사전차단서비스 시행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소비자가 원화결제서비스*를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수수료(결제액의 3~8%) 부담</p> <p>* 해외원화결제서비스(Dynamic Conversion Currency, DCC),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(KRW)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 소비자의 원하지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<b>근본적으로 차단</b>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</p> <p>-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가능</p>	'18.7월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(02-3145-7552)
13	비소구 적격대출 출시	<p><b>(신규)</b></p> <p>○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</p> <p>- 비소구 디딤돌대출,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적정 소득 기준 설정 예정</p> <p>* 보금자리론 비소구대출은 기시행(5.31일)</p>	주택금융공사 내 규 (‘18.9월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6)  주택금융공사 (051-663-8281)
14	‘정부24’ 홈페이지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 가능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 예보(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) 및 은행연합회(휴먼계좌조회시스템)에서만 미수령금(예금보험금, 파산배당금 등) 조회 가능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 「정부24」(정부서비스 종합포털)와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령금 조회서비스 확대 제공</p>	'18.3분기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(02-2100-2903)  예금보험공사 회수총괄부 (02-758-0411)

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5	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간소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거주 채무자 (이하 '해외거주 채무자')의 경우도 국내 채무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</li> <li>국내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데 반해 <b>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매우 저조한 상황</b>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거주 채무자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<b>채무조정 절차간소화</b>(18.4월 내규 개정)</li> <li>안내문 발송, 재외국민포탈 및 예보 홈페이지와 한인회,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거주 채무자도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<b>안내 강화</b></li> </ul>	<p>'18.3분기</p> <p>「해외재산 회수업무기준 (내규)」</p>	<p>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(02-2100-2903)</p> <p>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부 (02-758-0545)</p>
16	장기소액연체자 지원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기소액연체자*를 대상으로 <b>지원 신청·접수</b>(18.2월~8월)를 받고, <b>상환 능력 심사</b>를 거쳐 <b>채권정리</b></li> </ul> <p>* 채무원금 1,000만원 이하, 10년이상 연체</p>	'18년 4분기	<p>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2614)</p> <p>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(051-794-4743)</p>
17	단체-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 마련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손 상품 간 연계제도 부재</li> <li>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,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퇴직자가 <b>단체실손상품</b>을 일반 <b>개인실손상품</b>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</li> <li>취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개인실손</li> </ul>	'18.4분기	<p>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2964)</p> <p>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(02-3145-8246)</p>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상품을 중지하였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는 제도 마련		
18	자동차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소비자는 보험처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*</p> <p>* 자동차 사고시 일반적으로 과거 3년 간의 사고건수·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·할증되나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· 예측하기 어려움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후 보험료 안내 서비스*를 제공</p> <p>* 보험처리를 할 경우와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 안내(사고후 3년간)</p>	<p>‘18년 하반기 *보험사별 순차적 시행</p>	<p>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2963)</p> <p>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(02-3702-8590)</p>

### 3. 금융 새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.

19	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	<p><b>(신규)</b></p> <p>○ ‘05년 국내 최초논의 이후 10여년 만에 구체적인 통합감독제도 도입*</p> <p>* EU, 호주 등 통합감독제도를 이미 도입한 금융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축소</p> <p>- 7월부터 7개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 우선 적용</p> <p>-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, 금융그룹내 위험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예정</p>	<p>모범규준 시범운영 (‘18.7.2)</p>	<p>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 (02-2100-2592)</p> <p>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(02-3145-8204)</p>
20	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·제재의 일관성 확보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업무는 금감원을 포함한 10개 기관*에 위탁</p> <p>* 금감원, 농협조합 등 중앙회(5개), 우정사업 본부, 행정안전부, 관세청, 중기부</p>	<p>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(‘18.7월, 잠정)</p>	<p>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(02-2100-1725)</p>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b>(개선)</b> ○ 업권별 검사운영과 관련된 <b>전반적인 절차를 명시</b> 하고, 기관·임원·직원에 대한 <b>제재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</b> ○ 제재의 공정성·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 <b>FIU 제재심의위원회</b> 」를 구성하고, 「 <b>검사수탁기관 협의회</b> 」를 정례화하여 검사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		
21	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 강화	<b>(현행)</b> ○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<b>내부통제 의무*</b> 를 전부(금융지주·증권금융회사, 집합투자업자) 또는 일부(새마을금고중앙회, 신탁업자 등) 면제 * ①의심거래보고 등 관련 보고책임자 임명, ②업무지침 마련, ③임직원 교육 등 <b>(개선)</b> ○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국제기준과 미·영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<b>면제 규정을 삭제*</b> *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既 시행중('18.4.1일)	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8.8.28일)	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(02-2100-1725)
22	외부감사인 선임 권한 변경	<b>(현행)</b> ○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 <b>(개선)</b> ○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<b>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</b>	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('18.11.1)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(02-2100-2693)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						
23	회계부정 과징금 제도 시행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공시법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% 내에서 과징금 부과 (상한 20억원)</p> <p>* 회사관계자, 감사인은 증권신고서 발행 관련 위법행위에만 과징금 부과 가능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, 회사관계자, 감사인에 과징금(절대상한 없음) 부과</p> <p>&lt;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기준 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회 사</td> <td>회 사 관 계 자</td> <td>감 사 인</td> </tr> <tr> <td>회계기준 위반액의 20% 이내</td> <td>회사 과징금의 10% 이내</td> <td>감사보수의 5배 이내</td> </tr> </table>	회 사	회 사 관 계 자	감 사 인	회계기준 위반액의 20% 이내	회사 과징금의 10% 이내	감사보수의 5배 이내	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(‘18.11.1)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(02-2100-2693)
회 사	회 사 관 계 자	감 사 인								
회계기준 위반액의 20% 이내	회사 과징금의 10% 이내	감사보수의 5배 이내								

#### 4.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.

24	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(상호금융, 저축은행, 여전)	<p><b>(신규)</b></p> <p>○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(Rent to Interest)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심사</p> <p>○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*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“유효담보가액 초과분”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</p> <p>* 유효담보가액 = 담보기준가액 × 담보인정 비율 - 선순위 채권액(임차보증금 등)</p>	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(상호금융 7월, 저축은행·여전 10월)	<p>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02-2100-2835)</p> <p>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(02-3145-8072) 저축은행감독국 (02-3145-6773) 여신금융감독국 (02-3145-7447)</p> <p>신협중앙회 (042-720-1311) 농협중앙회 (02-2080-3111) 수협중앙회 (02-2240-3201) 산림조합중앙회 (02-3434-7231) 새마을금고중앙회 (02-2145-9208) 저축은행중앙회 (02-397-8640)</p>
----	---	---	--	--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									
				여신금융협회 (02-2011-0762)									
25	신용카드 단말기는 IC등록단말기만 사용 가능	<p><b>(현행)</b></p> <p>○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전법 개정 ('15.7.21)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(예 : “IC등록단말기”)를 '18.7.20까지 설치·이용하여야 함</p> <p>- '18.7.20이전까지는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마등록 단말기도 사용이 가능</p> <p><b>(개선)</b></p> <p>○ '18.7.21.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을 설치·이용하여야 하며,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마등록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음</p> <p>- 기존 단말기를 계속 설치·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 해지, 소속 뱅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가능</p>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'15.7.21.~ '18.7.20</td><td>'18.7.21~</td></tr><tr><td>기존 단말기</td><td>사용 가능</td><td>사용 불가</td></tr><tr><td>IC등록단말기</td><td>사용 가능</td><td>사용 가능</td></tr></table> <p>※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무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지원중</p>	구분	'15.7.21.~ '18.7.20	'18.7.21~	기존 단말기	사용 가능	사용 불가	IC등록단말기	사용 가능	사용 가능	여신전문 금융업법 (‘18.7.21~)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5)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(02-3145-7440)
구분	'15.7.21.~ '18.7.20	'18.7.21~											
기존 단말기	사용 가능	사용 불가											
IC등록단말기	사용 가능	사용 가능											
26	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(저축은행, 여전)	<p><b>(신규)</b></p> <p>○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확인</p> <p>○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</p> <p>○ 변동금리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출금액 산정</p>	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(저축은행, 여전 10월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5)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(02-3145-6792) 여신금융감독국 (02-3145-7447)  저축은행중앙회 (02-397-8640) 여신금융협회 (02-2011-0762)									

연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7	대부업자의 소액대출 제한	<b>(현행)</b> ○ 대부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시 채무자 소득·채무 확인 의무 면제  <b>(개선)</b> ○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의무면제 범위를 100만원 이하 대출로 축소	대부업법 시행령 (‘18.하반기)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2612)